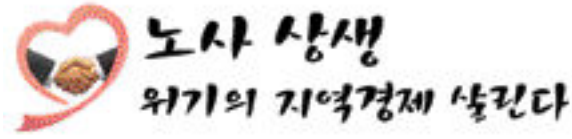


서창 만드리 풍년제 어깨춤 절로~



제11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열린 21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세동마을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요에 따라 어깨춤을 추며 김매기를 하고 있다. '만드리'는 마지막 김매기라는 뜻으로 김매기 시기인 7월 백중(음력 7월15일)에 불렀던 광주 지역의 대표적 농요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 대기업 노조 파업 지역경제 멎는다

주변 식당·유통업체 손님 끊겨 아우성

파업 피해 협력업체에 직격탄... 손실 눈덩이 국내의 신인도 하락 등 간접 피해도 엄청나

기아차 협력업체 A 대표이사는 요즘 속이 바짝바짝 탄다. 기아차의 부분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물량이 30% 가까이 줄어들어서다. 일감이 없는데, 직원 급여와 공과금 등 매월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앞으로가 걱정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일상화된 파업에 따른 피해는 260여 협력업체로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협력업체들은 2006년 500억원, 2007년 300억원, 2008년 210억원 등 최근 3년간 1천억원이 넘는 매출손실을 입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0일까지의 부분 파업으로만 136억원의 피해를 봤고, 오는 23일까지 파업이 진행되면 모두 284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

기아차 전체로 볼 때 피해는 더 크다. 19년 동안 쉬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되풀이 한 결과, 2000년부터 계산을 해봐도 1조원을 육박할 정도로 매출손실 규모가 크다.

2000년 매출손실액 540억원(생산차질 대수 5천200대)을 시작으로 ▲2001년 330억(2천900대) ▲2002년 870억(8천200대) ▲2003년 670억(5천700대) ▲2004년 410억(3천200대) ▲2005년 1천490억(9천900대) ▲2006년 2천300억(1만5천대) ▲2007년 1천240억(8천대) ▲2008년 870억(6천500대) 등 모두 8천72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생산성 및 국내외 브랜드 신인도 하락 등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엄청나다.

금호타이어도 비슷하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노조의 태업으로 발생한 매출손실

만 320억원인데, 전면파업으로 치닫게 될 경우 생산차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자금력이 취약한 288개 협력업체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1년~2008년까지 진행된 파업으로 2천9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 기간 누적파업일수는 128일(부분파업 102일·전면파업 26일), 단순 계산으로만 하루에 16억3천만원씩 날린 셈이다. 지역 경제를 이끌어야 할 대기업이 파업 때문에 속으로 멎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아차,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의 파업이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선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직원을 주고객으로 영업하는 주변 식당 등도 "직원들이 파업 등으로 씬씬이도 즐기고 평소 찾는 손님도 4분의 1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오랫동안 불황에 시달려온 주변 상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 근로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유통업체도 불안해하는 눈초리다.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 판매가 1분기에 전년보다 5.2%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 들어 가파르기로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아차나 금호타이어 같은 대기업이 파업을 하면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점은 물론 골목 상권까지 극심한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사가 슬기롭게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10인대책위-유인촌 장관 오늘 별관문제 면담

'옛 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이하 10인 대책위)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별관 문제를 놓고 첫 공식 면담을 갖는다.

이날 10인 대책위가 별관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오월의 문'과 '3분의 1 존치'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 별관 문제 논란의 종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0인 대책위 간사위원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조영택 국회의원, 정부측 대표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5시 장관실에서 만난다. 10인 대책위는 유 장관에게 '오월의 문'과 '3분의 1 존치'안의 도출 배경을 설명한 뒤 별관 전면철거를 고수해온 정부에 입장 변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오월의 문'은 별관 중앙 1.2층 일부를 뚫어 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지역 12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원탁회의'가 10인 대책위에 다수안으로 제시한 대안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별관을 완전 철거한 뒤 상징물 등을 건립하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로부터 별관 문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전남 시민대책위원회' 간부와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문광부 앞에서 시위를 갖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다수인인 '오월의 문'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층미만 건물 신축땀 읍·면·동서 신고

정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

정부가 21일 발표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선안은 소규모 건축신고를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등 각종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행정기관간 규제·절차 줄어든다=정부는 행정기관간 규제·절차를 간소화해,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 건축신고를 시·군·구에 하던 것을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중양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승인 절차를 고쳐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구비서류 줄인다 71~300여종 확대=정

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 종으로 확대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일례로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경우 관공서에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교육필증, 면허증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용에도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을 현재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해 지자체가 500억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 아래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채의 자율 발행 한도액을 현행 일반채원 대비 0~10%에서 0~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투·융자사업 심사 하한 기준액을 광역 시·도의 경우 20억원(서울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시·군·구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현행보다 감절 가량 높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가족사랑 음악회' (Family Love Music Concert) featuring Esdiel Music Company and the Namgu Community Music Hall. Includes a photo of a family and details about the concert on July 22, 2009.